

도시재난관리체제 운영실태 분석 연구
- 소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rban Disaster Management System
- Focusing on Fire Service -

백 동 승*
Baek, Dong Seu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Urban Disaster Management System(UDMS) and proposed improvements, focusing on fire-fighting. We learned the problems with the UDMS empirically, conducting a survey intended for officials in fire station in various prefectures include big city, 6 metropolitan city and Gyeonggi-do. The problems with the UDMS were classified mainly into problems with law operating system, administration system and systematic countermeasur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regions that include Seoul and other big cities manage urban disasters better than the prefectures of which Gyeonggi-do and others are parts. Consequently, it is desirable to cater appropriate Urban Disaster Management Systems into each of the two parts, one for big cities and the other for prefecture.

Key words : Urban Disaster Management System(UDMS),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Urban Disaster

요 지

이 연구는 재난관리체제의 운영실태를 소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와 6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지역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재난관리상의 문제점은 법·제도운영체제, 행정조직, 단계별 대응체제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는 대도시지역과 경기도 시군지역에서 느끼는 재난관리체제 실태의 거의 상반되게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와 시군지역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재난관리체제를 마련·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핵심용어 : 재난관리체제, 소방방재, 도시재난

1. 서 론

우리사회는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시설물의 대형화, 지하화, 고층화 등으로 이용형태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시재난관리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삼풍백화점 붕괴, 대성가스충전소 폭발사고, 인천호프집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 등 뼈아픈 재난사고를 경

험하였다. 이러한 도시형 재난의 공통점은 사전예방의 소홀과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의 대응 역시 신속하고 체계적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재난관리의 근간이 되는 예방, 대응, 수습·복구의 기본적인 내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마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수습과 체계적인 복구방안 없이 우왕좌왕함으로써 방재시스템의 비체계성을 종합적으로 보여

* 정회원, 안양대학교 박사과정, 안양소방서장 (E-mail: bds2480@hanmail.net)

준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체제 역시 종합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난의 유형별 관리로 인한 행정조직의 분산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결여, 비전문 인력과 기관의 업무수행으로 인해 현저히 떨어지는 전문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재난발생 후 구조·구난의 인력, 장비, 예산의 배치가 효과적이지 못하고 재난관리법령은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상호간 법령체제가 산만하여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및 보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도시와 군지역간 생활환경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재난대응체제는 대도시나 중소도시 심지어 농촌지역까지도 거의 동일하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체의 실시를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된 도시재난관리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일선기관에서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체제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파악·분석하였다.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재난관리과정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재난관리이론의 체계화를 도모하는 한편,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도시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소방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관련 법령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도시재난관리에 관련된 행정조직 및 유관기관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였다. 또한, 재난상황의 예측, 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응급의료체제에 대한 실태, 정보활동 및 자원관리 등을 분석하였다. 재난은 수준에 따라 개인, 집단 또는 조직, 지역사회나 자치단체 등으로 다양하게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을 서울특별시와 부산·인천·대구·광주·울산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로 정하였다. 또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서로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도시재난관리체제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운용실태 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이론연구를 통하여 재난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정리하고 이에 따라 설문조사 문항을 설계하였다.

3.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재난¹⁾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으며, 아직도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재난을 '인간의 잘못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재난의 개념은 다양한 자연현상 혹은 기술적인 사고에 기인한 건물의 피해와 물리적 충격의 정도 등에 따라 정의되어 왔는데 재난을 정의하는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인 재산과피의 정도 및 사상자의 숫자를 사용하였다.

재난관리(disasters management)는 재난에 대해 알고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재난의 피해를 완화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집행수단을 강구하는 의도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Kasperson and Pijawka, 1985). 그런데 인지가 발달하지 못했던 미개사회일수록 재난을 '신의 행동'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었으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에 의해 재난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응능력이 개발되었다.

광의의 재난관리는 완화관리단계와 복구관리단계는 대체로 완만하며 긴급대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과 크게 구분되지 않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반면에 협의의 재난관리는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란한 위기상황에 질서를 부여하는 대응 및 복구과정으로 일상적 비상대응기관들의 자원을 관리하고, 조직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체계적인 사고지휘체제를 구성함으로써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류충, 2003).

재난관리체제와 소방행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론 및 방법론적의 대응체제와 재난관리 행정조직체제에 치중하여 왔다(최종태, 1991). 최진중은 도시소방방재활동의 기본방향과 도시소방방재 행정의 일원화 및 법규체제 정비를 비롯한 도시정보체제 도입과 자율적인 방화관리를 주장하였다(최진중, 2001). 아직까지 고려되지 않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방재능력 향상방안으로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배치기준을 인구수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소방력 배치기준 개정을 제의하기도 하였다(최명화, 2000).

한편, 소방방재정책에 대해서는 소방방재 정책과정의 주요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선호를 융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체제를 확보할

1) 재난의 신개념은 기존의 자연재해개념(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기존의 인적재난개념(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 그리고 사회적 재난개념(국가기본체제 마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설명자료」, 소방방재청, 2004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김덕준, 2003). 또한 한국의 재난관리 행정체제는 소방을 중심으로 재난통합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대응체제는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재난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고 있다(최태영, 2001). 일선 재난관리행정에서 네트워크 시스템(Network System)의 구축과 재난지휘본부의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재난대응 시 재난현장 자원관리, 재난지역 외부자원 재배치 및 재난현장 인명구조와 응급의료체계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특히 장석화는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제는 재난관리조직 활성화, 정보통신망의 구축, 지역주민의 참여와 민간지원체제 강화가 필수요소라고 주장하였다(장석화, 2002).

본 논문은 재난의 법제도, 기능과 구조 그리고 운영 등 재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었다는 면에서는 선행연구와 범위가 유사하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비교해서 연구한 것이나 실무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4. 도시재난 실태 조사·분석

4.1 조사개요

본 설문조사는 선행연구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파악한 도시재난관리체제의 관리실태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크게 도시재난관리에 관한 법·제도 및 운영체제, 도시재난관리 행정조직, 도시재난관리의 단계별 대응체제 관리실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시군에서 도시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2004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15일간 실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및 경기 소방재난본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하였고 광역시에는 인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서울특별시 88부, 경기도 923부, 광역시 812부로 총 1,838부를 회수하여, 응답이 신뢰하

기 어렵고 해석이 불가능한 15부를 제외하고 총 1823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항목별로 자유도(Degree of Freedom)²⁾, 편향(Bias)³⁾을 분석하였다.

4.2 재난실태 분석

도시재난관리의 법, 제도운영체제, 행정조직, 단계별 대응체제에 대하여 일선에 있는 소방관계자와 재난·재해방재관련자들이 평소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고 있는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난관리에 관한 법, 제도 운영체제에서는 예방, 수습, 복구기능이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각종 시책이 다원화되어 있으며 업무한계 모호와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종합적인 도시재난관리가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심의기구와 수습기구가 분리되고 비상설 운영이 되고 있어 현장상황의 종합판단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원화된 도시재난관리 지휘체계가 지방자치단체의 각 재해·재난업무조직과 인력의 분산으로 독립된 운영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잦은 인사교체와 근무기피현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민의 안전의식이 미약했으며 위기대응조직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대형사고시 많은 피해의 속출이 예상된다. 도시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은 전문인력의 부족, 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화 부재, 예방 및 대비시스템 미흡, 상황실의 분리 운영 등으로 신속한 대응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도시재난관리 행정조직이 다원화되어 있으며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고 정책결정 및 조직구성이 다양해서 정책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셋째, 도시재난관리 단계별 대응체제 중 예방단계에서는 도시재난관리 계획수립 및 운영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관련법에 의한 중복된 법체계 및 업무분산에 따른 어려움이 나타났다. 연구기관과의 협조체제가 미흡하고 안전관련 시설물의 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2) 자유도(Degree of Freedom)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는 점수, 변인의 수 또는 한 변인의 범주의 수를 말한다. 기호로는 df라고 표시한다. 어떠한 제한 없이 임의로 세 개의 숫자를 써보라고 한 경우에는 세 개의 숫자를 완전히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자유도 df=3이다. 통계적 분석의 경우 자유도는 사례수(표본의 수) 및 통계적 제한조건의 수와 관계가 있다. 제한조건의 수를 k라고 하면 자유도의 일반공식은 $df=N(\text{사례수})-k(\text{통계적 제한조건의 수})$ 이다.

3) 편향(Bias)은 실제의 상태와 다르게 나타나는 평균적 차이를 통칭하여 나타내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추정량의 편향이라 함은 추정량의 평균과 모수의 참값과의 차이를 뜻한다. 위 설문조사의 분석에서는 응답항목 척도의 평균값 즉, '보통이다'에 해당되는 0이 모수의 참값이 되며 각 척도값이 적용된 실제 응답비율의 값은 추정량의 평균값이 되어 이 두 값의 차이로 각 지역별 응답편향을 알아보았고 이에 대한 단위는 B를 사용하였다.

투자개념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난발생 이후 문제점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지역은 대체로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도 및 기타 도서지역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단계에서 재난유형, 단계별 기능조정을 통한 역할분담은 대도시 지역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도권외 시도지역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도시민의 안전의식, 교육훈련이 미흡하고 참여의식이 부족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에서 대도시 지역은 양호하였으나 수도권에서는 유기적인 업무연계성 확보의 부족으로 협조체제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대응단계에서는 도시재난 현장대응능력이 부족하고 현장대응조직의 수평, 수직적 협력관계가 미흡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협력 및 자원봉사자들의 관리가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수재난에 대한 소방관서의 긴급구조 전문대응팀이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재난관련 전문가와 대응장비가 부족하고 특수재난시 자원동원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 전문부서별 대응자원이 분산되어 있다.

응급의료 대응능력은 신고체제가 완전하게 통합되지 않았으며 의료기관, 공인 적십자사 등의 상시출동지휘팀 운영이 되어있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응급의료 대응을 통제, 지휘할 수 있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유 및 NGO와의 정보전달이 대도시 지역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농복합시 지역에서는 정보전달체제가 미흡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관련정보의 공유와 정책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상재난통신망 확보가 미흡하여 유·무선통신망 두절시에 위성통신을 이용한 기간통신망의 구축이 미흡하고 재난현장과 상황실을 연결하는 위성영상 지휘통신망은 일부 사용하는 실정으로 도시재난관리 통합무선망의 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재난예방을 위한 도시재난방송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긴급사태시 재난경보방송의 우선 실시에 대한 법, 제도 기능이 미비하였다.

수습, 복구단계에서는 도시재난관리 기관간의 과학적 원인조사 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의 부재로 원인조사 분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아 현장지휘체제의 혼선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고시마다 각 기관별 임시 지휘사무소의 조성 등의 다원화 지휘체제로 현장수습 및 복구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복구지원체제의 인력, 장비, 물자확보, 광역동원체제의 구축이 미흡하고 복구에 필요한 안전산업의 지원정책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재난손실 보전대책은 잘 강구되어 있지 않으며 수습체제에 대한 표준 행정지원체제 및 피해조사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기준이 미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험제도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농복합시 지역에서는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재난보험을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3 지역간 재난실태 비교분석

표 1은 도시규모별 설문조사 응답편향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서울시와 광역시는 대도시로 종합하였고 경기도는 시와 군의 편향도를 평균하였다⁴⁾. 응답점수는 매우 그렇다 2점, 그렇다 1점, 보통이다 0점, 아니다 -1점, 전혀 아니다 -2점으로 계산하였다. 대도시지역의 경우 편향값(B1)이 0.5이상이고 시군지역의 편향값(B2)과 상대적 차이가 1.0이상인 항목은 격차가 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시군지역은 편향값(B2)이 -0.5이하이면서 대도시지역의 편향값(B1)과의 상대적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항목을 격차가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체적으로 대도시와 경기도 시군의 편향도를 비교해 보면 거의 모든 항목에서 부호가 반대이다. 즉 대도시 지역은 (+)인데 비해 시군지역은 (-)이다. 이는 대도시지역과 시군지역의 재난에 대한 문제인식이 정반대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도시재난관리의 예방, 수습, 복구기능의 경우 대도시지역은 분산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시군지역은 분산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도시와 시군지역의 편차는 약 1.9로서 차이가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법제도 운영체제에서는 도시재난관리의 기능과 도시재난 유형에 적합한 위기대응조직 주체가 대도시와

4) 표 1의 변수 중 단계별 대응체제에서 편향도(B)를 기준으로 도시규모별 차등 합리화 방안을 다음 장에서 연구하였다. 선택기준은 대도시 지역 문제점으로 B1값이 0.580미만이고 B2와의 상대적 차이가 0.9이상인 항목을 선택하였고 도농복합시 지역 문제점으로 B2값이 -0.60미만이고 B1과의 상대적 차이가 1.2초과인 항목을 선택하였다. 도시규모별 특성이 뚜렷하지 않은 항목이나 대표성이 없는 항목에 따라 위 기준에 부합하지만 선택되지 않은 항목이 발생할 수 있다. 위 편향도(B)의 기준값에 대해, 도시규모별 전체 설문 응답결과를 기준으로 각각의 B1, B2 최저치가 서로 다르므로 인해 이를 각각의 편향도 기준값에 반영하였다.

표 1. 도시규모별 설문조사 응답 편향표

변 수	설문내용	B(편향도)		
		대도시지역 (B1)	시군지역 (B2)	격차
법·제도 운영 체제	1. 도시재난관리의 예방, 수습, 복구기능 분산여부	-0.947	0.951	1.898
	2. 정책심의, 수습기구 운영체제	0.778	-0.386	1.164
	3. 일원화된 현장지휘체제(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등)	0.190	-0.253	0.443
	4. 도시민의 안전의식 변화에 대한 시민참여	0.416	-0.338	0.754
	5. 도시재난유형에 적합한 위기대응조직 주체	0.552	-0.604	1.156
	6. GIS를 이용한 도시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0.411	-0.611	1.022
행정 조직	1. 도시재난관리 행정조직 일원화 체계	0.764	-0.789	1.553
	2. 도시재난관리 행정조직 총괄조정기능	0.794	-0.718	1.512
	3. 도시재난관리의 정책결정 및 조직구성	0.005	-0.098	0.103
	4. 도시재난관리의 각 분야별 전문인력	0.622	-0.609	1.231
단계별 대응 체제	<예 방 단 계>			
	1. 도시재난관리 계획수립, 운영체제 등 총괄조정	0.695	-0.643	1.338
	2. 안전관련 시설물의 성능평가 및 연구기관 간 협조	0.670	-0.598	1.259
	3. 재난유형별 사전예방점검 전문인력	0.665	-0.631	1.296
	4.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개념	0.524	-0.314	0.838
	5. 재난발생이후 문제점 개선	0.402	-0.336	0.738
	<대 비 단 계>			
	1. 재난유형, 단계별 기능조정	0.673	-0.582	1.255
	2. 도시민의 안전의식 교육훈련체계	0.810	-0.690	1.5
	3. 민, 관, 군 협력체계	0.434	-0.347	0.781
	<대 응 단 계>			
	1. 도시재난 현장대응능력	0.417	-0.430	0.847
	2. 현장대응조직의 수평, 수직적 협력관계	0.479	-0.474	0.953
	3. 자원봉사자들의 역할	0.369	-0.320	0.689
	4. 특수재난발생시 대응능력	0.575	-0.464	1.039
	5. 응급의료 대응능력	0.062	-0.169	0.231
	6. 대응단계별 정보공유 및 NGO와 정보전달	0.533	-0.583	1.116
	7. 비상재난통신망 확보	0.483	-0.366	0.849
	8. 도시재난방송 기능	0.710	-0.552	1.262
	<수습·복구단계>			
	1. 도시재난관리기관간의 과학적 원인조사 분석	0.664	-0.598	1.262
	2. 사고대책본부 구성, 운영의 일원화	0.663	-0.586	1.249
	3. 도시재난관리기관간의 복구지원체계	0.554	-0.508	1.062
	4. 도시재난 발생시 재난손실 보전대책	0.650	-0.586	1.236
	5. 도시재난관련 보험제도	0.766	-0.677	1.443

시공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현장지휘체계의 일원화와 도시민의 안전의식 변화에 대한 시민참여의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직은 도시재난관리의 정책결정 및 조직 구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대도시와 시군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단계별 대응체제에서는 수습·복구단계는 모든 항목에서 대도시와 시군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대응단계는 비교적 대도시와 시군간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예방단계에서는 총괄조정, 기관간 협력, 전문인력 면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 개념과 재난 발생이후 개선은 큰 차이가 없다. 대비단계에서는 기능조정과 교육훈련 체계에서는 큰 차이가 있으나 군관민 협력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목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도시와 시군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이 늘어나고 도시광역화가 진전될수록 그 차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사회가 점차 복잡해질수록 재난의 위험도 그 만큼 높아지고 있다. 과거 수년간 경험한 재난현황을 보면 빈도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재난의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어가고 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난관리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각종 보고서와 연구를 통하여 제기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소방방재의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도시지역은 비교적 문제가 덜한데 비해 시군지역은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얻은 시사점은 전국의 모든 지역에 동일한 재난관리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도시지역과 시군지역에서 느끼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이 다르고 편향도 완전히 정 반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대도시지역과 시군지역에 재난관리 시스템을 차등적으로 적용·운영해야 한다. 경직된 운영의 일원화는 대도시

지역에는 유리하지만 시군지역은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참 고 문 헌

- 국립방재연구소 (2004). 방재안전세미나. 연구보고서, 국립방재연구소.
- 국토연구소 (2003). 도시방재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국토연구원.
- 김덕준 (2003). 소방방재 정책과제에 관한 인식연구. 한국소방정책학회 논문집, 한국소방정책학회, 제2권, 제1호, pp. 235-258.
- 대구광역시소방본부 (2004). 대구국제소방안전EXPO 대형재난대응사례집. 대구광역시소방본부.
- 도시방재안전연구소 (2003). 대구지하철 화재의 문제점 및 도시철도 안전대책확보방안. 도시방재안전연구소.
- 류 충 (2003). 재난관리론. 중앙소방학교.
- 장석화 (2002). 재난대응현장관리에 대한 사례분석. 한국소방정책학회 논문집, 한국소방정책학회, 제2권, 제1호, pp. 169-196
- 최영화 (2000).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방재대응력 향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최종태 (1991). 한국소방행정에 관한 연구 : 자율소방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 최진중 (2001). 한국의 소방력 배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최태영 (2001). 재난관리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행정자치부 (2003). GIS를 이용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행정자치부.
- Kasperson, R. E. and Pijawka, K. D.(1985). Societal Response to Hazards and Major Hazard Events: Comparing Natural and Technological Hazards, PAR, vol 45. pp. 7.

© 논문접수일 : 2004년 11월 24일

© 심사의뢰일 : 2004년 11월 24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11월 30일